

김어준 “고발하면 무고 대응”…여권 내 권력 갈등 부채질 우려도

줌 인 **여의도** 여권, 공소취소 거래설 갈등 후폭풍

장인수 전 기자 폭로 파장…청-김어준 대립 장기화 조짐
정청래 “기가 막힌 음모론, 모든 방법으로 대응 나설 것”
검찰개혁 방향·방미심위 조사 따라 갈등 재점화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추진과 검찰수사권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공식 비판에 나선 가운데, 김어준씨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수위 조절 움직임 속에도 여권 내부의 권력 갈등의 불씨로 잠복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18면**

◆주말엔 주춤…방미통위로 공 넘겨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로웠던 양측의 공세는 지난 주말 동안 주춤했다. 지난 13일 홍익표 정무수석이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직격한 뒤 청와대 측은 추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어준씨 역시 방송 이후 추가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긴 분위기”라며 “여권 지지층의 갈등을 의식한 수위 조절”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논란은 지난 10일 김어준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정부 고위인사가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하며 보완수사권을 거래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여권은 즉

각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방송에 출연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라고 직격했다. 청와대 고위직이 특정 방송을 공개 비판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면서 그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 적절한 조사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차원에서 잘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안 국회 처리 차질과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사안이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이라면 서도 “이런 사안을 갖고 특정 방송사에 보복처럼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 권력 갈등의 단초 분석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빛뉴스

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기가 막힌 음모론”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폭로 당사자인 장인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으나, 김어준씨는 제외했다.

반격에 나선 김어준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검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가 출연 전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짜고 친 게 아니다. 모든 기록이 남아 있다”며 고

발 가능성과 관련해 “좋다.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리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어준 채널은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다. 김어준씨는 2023년 TBS ‘뉴스공장’에서의 이재명 지지 발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재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과징금이나 중징계보다는 ‘의견 제시’ 또는 ‘주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 의혹을 넘어

여권 내부 권력 갈등의 단초라는 것이 여의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수위 조절로 표면적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공소취소 여부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방미심위 조사 결과와 고발 수사 성과에 따라 후폭풍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당론 추진’을 예고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영란 기자 ylrlee31@idaegu.com

뒤로가는 선거구 확정 논의…TK 개편 줄속 우려

국회 정개특위, 인구 하한 미달지역 처리 등 입장차만 ‘재확인’
19일 소위원회 회의…‘유지·통폐합 여부’ 몰라 예비후보 한숨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3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논의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바람에, 대구·경북 선거구 개편이 시간에 쫓겨 줄속으로 결정할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대구 중구 제1·2선거구, 군위군 선거구, 경북 영양군·울릉군 선거구 5곳이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는 19일 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어 이달 말 추가 전체회의를 통해 선거구 확정기준과 지역별 쟁점을 다시 논의하고, 다음달 초 법안심사소위에서 구체적인 조정안과 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일정을 잡은 상태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인구 하한 미달지역 처리와 중대선거구 도입, 행정통합 변수 등을 둘러싸고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뚜렷한 성과 없이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관계 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방향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범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반영방식 등을 놓고 위원들 간에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은 “지방소멸 지역의 대

표성을 지키기 위해 인구 편차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들은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선거구 확정이 지연되면 서, 대구·경북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어느 선거구가 유지될지, 통폐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전직 대구시의원은 “선거구 윤곽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지역 현안과 후보, 정당의 책임을 제대로 따지기 어렵다”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 지방선거가 ‘무관심·저투표율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ylrlee31@idaegu.com

“TK 특별법 처리 지연…선택적 통치” 맹비난

주호영, 대통령·여권 질타…“균형발전 꺾한다면 같은 속도로 처리해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이 TK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선택적 통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5극3특’ 국정 기조와 상충된 행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구·경북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광주 특별법은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신속히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멈춰 있다. 같은 광역통합법인데, 한 쪽만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은 국민에게 불공정한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을



거론하며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 했지만, 현실은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로 국토 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면 TK 법안도 같은 속도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구시의회 반대 등 일부 이견이 지연 사유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결이 이미 마무리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호남의 특별법도 지역 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가 추진력을 보였다”며 “특정 지역만 우선 처리하는 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통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이 대통령 ‘초고속 추경’ 지시에 여야 신경전

여 “경제 불확실성 대응 위해 시급”
야 “선거 앞두고 ‘표폴리즘’ 반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초고속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

시에 따라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표폴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초과세수 추정치인 20조 원 안팎으로 거론되지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급으로 통화량이 많은 상황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물가 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

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유동성이 넘치고, 중동 사태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와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표폴리즘’”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방탕한 경제정책을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